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홍순직, 박덕배, 주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 (02-3669-412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지식경제부의 일곱 가지 과제 : 이윤호 장관 초청 토론

|                             |    |
|-----------------------------|----|
| Executive Summary .....     | 1  |
| 1. 고용창출의 확충 .....           | 2  |
| 2. 신성장 동력의 확보 .....         | 4  |
| 3.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 ..... | 5  |
| 4. 경상수지 개선 .....            | 6  |
| 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 7  |
| 6. 지방경제 활성화 .....           | 7  |
| 7.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 8  |
| < 토론 > .....                | 9  |
| ■ HRI 경제 지표 .....           | 28 |

## 지식경제부의 일곱 가지 과제 : 이윤호 장관 초청 토론

- **고용창출의 확충** : 3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취약한 의료, 법률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부분을 발전시켜야 함. 최저 자본금 제도와 유사상호 금제 제도 폐지 등의 창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한 8개 분야에 걸친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과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규제개혁의 조화를 이루어야함
- **신성장동력의 확보** : R&D 사업의 통합·단순화, 전과정 공개, 그리고 단계별 규제 완화를 주 골자로 하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을 수립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산업의 주력산업편입, 그리고 서비스부분의 주력 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함
-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 : 국제유가의 130불 돌파와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제도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치마련, 발전량 기준의 36% 원전비중의 상승 등 국제유가 200불 시대를 대비해야함
- **경상수지 개선** : 현재 경상수지 적자, 국제유가의 향방에 따라 적자 가능성이 있는 무역수지의 개선, 2010년 1조불, 2012년 무역 1조 2천억불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과 관련된 인프라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함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전체의 99%의 기업수와 88%의 근로자가 속해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노베이트 코리아 전략을 실시함
- **지방경제 활성화** : 수도권에 비해 약한 지방경제의 문제점은 중앙이 아닌 보다 많은 자율권과 주도권을 지닌 지방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광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함
-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 : 민간이 할 수 있으면 민간에게 이양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자체 경영의 효율화와 유사 기능을 가진 공기업들 간 통합에 의한 민영화 추진

# 지식경제부의 일곱 가지 과제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8년 5월 26일
- 연사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 1. 고용창출의 확충

저는 1984년에 처음 귀국해서 전국 은행 연합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박용정 전 사장님의 편집국장시절 처음 들어온 신출내기한테 한국경제신문의 한 면을 할애해 큰 기사를 하나 써주셔서 인연이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개최되는데 내일 중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요일에 모임을 갖게 되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지식경제부의 과제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늘 걱정하는 일곱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의 큰 업무의 영역, 즉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지식경제부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지식경제부 하면 과거 산업자원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라는 이름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명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과거의 전통산업과 지금의 주력 산업을 그대로 이끌어가서는 앞으로 승산이 없다고 보시고 거기에 지식, 창의력, 혁신, 그리고 문화 등 새로운 알파가 가미되어야만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라고 작명을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구정 때 동남아에 골프를 치러 가려고 와이프와 비행기 표를 구해서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이틀 전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지식경제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답안지를 5페이지 이내로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확정은 아니었고 여러 사람에게 그런 답안지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무실과 도서관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혼자서 다섯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식경제부가 앞으로 지식·혁신주도형 산업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전환시키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지식·혁신 주도형 산업 강국으로의 전환』 이것이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비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아직 100일이 안됐는데 100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권도 바뀌고, 취임식도 하고, 소고기 파동도 나고, 그리고 FTA라는 큰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명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두에게 제 자신을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에 이르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큰 국정 방향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업관을 살펴보면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의 역량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정부가 굉장히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민주화 시대에는 기업의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총액출자 제한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 정부는 기업의 역량을 믿고 앞으로 우리 국가를 선진화하는 데 아주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대규모적인 규제개혁의 일환입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10년 정부의 잔재들이 꽤 남아있어서 요소요소에서 제도적·의식적으로나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쪽으로 기대하는 속도만큼 나가는 데 제동을 거는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일이 지나야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화두로 던졌던 제가 걱정하는 일곱 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 여러분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 걱정입니다. 최소한 30만개의 일자리 정도는 창출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에 19만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와 직결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반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 계획과 규제개혁이 모두 일자리와 관계되는 이슈들인 관계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조한 제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취약한 서비스부분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도 흔히 음식, 숙박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부분은 상당히 약합니다. 의료, 법률,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게 하느냐 라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의식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걱정과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에 창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법상 최저 자본금 제도와 유사 상호 금지 제도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유사 상호가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고 조그마한 유사 상호가 있으면 창업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유사한 상호라도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이 피해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시스템으로 옮겨가려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에 저희들이 산업 환경, M&A, 노동시장, 경쟁정책, 통신시장, 안전인증 산업금융, 그리고 기업세제 이런 8개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외국의 국제적 기준은 어떤지 잘 정리해서 관계 부처에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문제는 노동부가 주관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투자활성화와 규제개혁과 연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어떻게 하면 창출이 될까라는 고민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 2. 신성장 동력 확보

두 번째는 먹거리 걱정입니다.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능력을 보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

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성장 동력의 확보를 세 가지 부문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주력 산업을 어떻게 더 고부가가치 화하는가, 두 번째는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을 어떻게 우리의 주력 산업 쪽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서비스부문을 어떻게 주력산업화 하는가 입니다. 이 세 가지 부문에서 저희들은 성장 동력의 확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5월 6일 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전략이라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107개 R&D사업을 49개로 통합·단순화하고, R&D 전 과정을 공개하고, 단계별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R&D를 좀 더 기업인에게 친숙하게 만들어 민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의 장기적인 비전을 9월 달까지 마련해서 국민들 앞에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3.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

세 번째는 에너지 자원의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장기적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대통령이 저희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산업자원부의 자원 쪽은 질책을 받았습시다. 지금의 고유가 시대에 막상 발가벗고 보니까 준비가 상당히 늦었고 부족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신정부는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배럴 당 130불 넘는 상황을 맞으면서 에너지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은 에너지 절약 부분과 자원 확보를 통해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도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들을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내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원전비중을 결국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다시 일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 경험은 없지

만 우리는 원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비중이 지금 약 36%인데, 이것을 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능폐기장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일본의 경험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1차 석유파동을 맞은 다음 기름이 흔들리면 경제도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에너지 관련 정책을 펴서 굉장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저희들도 그들의 전철을 한번 살펴보고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배럴당 200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분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국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1배럴당 30불이나 60불 시대가 아니고 배럴당 120불 130불 시대입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고 쓰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행태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국민들께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4. 경상수지 개선

네 번째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국제 수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무관 시작할 때만 해도 국제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였기 때문에 국제수지 방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경상 수지는 거의 적자가 틀림없고 경상 수지를 튼튼히 받쳐주면서 흑자를 유지해 왔던 무역수지까지도 지금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부활한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2010년에 무역 1조불, 2012년에 1조 2천억 불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무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무역 부분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밀어주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역과 관련한 인프라를 어떻게 잘 구축하고 중소기업들을 해외 시장에 좀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측면에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 걱정입니다. 대기업들은 국제화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서 시장에 홀로서기를 시켜도 생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 비해 중소기업은 아직 상당히 열약합니다. 9988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자 그런 말이 아니고 전체 기업 수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개 스타플레이어만 가지고 우리 경제가 굴러가기에는 힘듭니다. 모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야지만 우리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4월 24일 발표를 했습니다. 6월 중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전략이라는 커다란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해 있는 고유가, 고자원가 시대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향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부분에서는 외국과 견줄만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서비스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는 외국과 생산성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생산성 격차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희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메울 수 있는 갭(Gap)이 있기 때문에 6월 중에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전략이라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향상 운동을 크게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6. 지방경제 활성화

여섯 번째는 지방 경제 걱정입니다. 지방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이구동성으로 지방경제가 참 힘들다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은 상당히 비대한데 비해서 지방경제 쪽은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KTX를 개통시켜 놓으면 지방으로 많은 것이 내려갈 줄 알았더니 역류하는 현상만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광역 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을 짜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광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초점은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로 지방

정부한테 좀 더 많은 자율권과 주도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역 단위는 돈의 흐름이 행정구역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도에서 시도를 뛰어넘는 광역경제권으로 책정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는 지난 정부의 균형 발전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 형식으로 저희들이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틀을 잡아서 행동계획을 짜고 옮기는 데는 적지 않은 마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경제를 걱정하면서 곧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방 경제권을 광역경제권 하에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연후에 지방 정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수도권 규제 문제도 점차적으로 손을 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7.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하고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조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기업관련 민영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기업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민간이 해야 합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은 경영을 효율화하고 또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무조건 무리하게 공기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생각은 정부도 없습니다. 그것은 노조와 상의하고 우리가 처한 경제 여건을 보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처리해야 할 분야입니다. 지식경제부와 관련된 R&D 연구소와 관련 조직들을 효율화해서 정부의 R&D 자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사용하려 합니다. 물론 제가 속한 지식경제부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일들도 참 열심히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사기가 충만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조직 운영상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

(정갑영 연세대학교 부총장)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내 걸고 있는 자율과 경쟁의 보장 그리고 경제 논리가 지배한다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철학 속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의 산자부, 지식경제부 역할이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환경 조성파 지식 혁신 주도형 산업 구축하는데 있어서 R&D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많은 부문에서 정권교체가 아직도 멀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을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 웹사이트만이라도 한번 깔끔하게 전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정부 웹 사이트의 예를 들면 퍼플릭 서비스 올인원 플레이스(Public service all in one place)라고 해서 포털 하나 걸어놓고 들어가서 문제 중심으로 누르기만 하면 관련된 부서가 다 나오게 운영되는 정부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비자와 전혀 상관없이 과거의 딱딱한 제도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의 위기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이념이나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요즘은 대통령이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광우병 걸리면 수입 안하겠다고 하는데 안 믿고 사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수입해서 먹을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큰 두 가지 과제인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 철폐에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경쟁이 가능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미루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요즘 엄청나게 많은 숫자 기관장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거처럼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줄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코드인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전문성에 의해 여러 가지로 가느냐에 따라 신

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혁신 주도형 산업의 문제는 결국은 전문 인력과 서비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 인력이라 하면 우리는 고등, 대학 교육에 관련된 것과 R&D 지원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된 부처나 이를 추진하는 정책들이 정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식경제부의 이름 그대로 산업차원에서 접근해서 일을 같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 함께 전문 인력의 육성 정책을 과감하게 같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나름대로 지원 플러스 규제하고, 과거에 과학기술부 쪽에서는 이공계 중심으로 지원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또 별도로 지원해서 규제와 지원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문제를 광역 개발 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학교 원주 캠퍼스를 맡고 있는데 원주는 지역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두개가 같이 지정된 곳입니다.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의 기공식을 다음 달에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공식의 배경은 기공식이라도 빨리 해 놓아야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도 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지역 사회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혼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Guide line)과 바텀라인(Bottom line)을 제시해야만 지역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방향 가이드라인 없이 복잡한 수도권외의 규제 완화 지역과 광역 경제권 중심의 지역개발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 사이에 토지보상이나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 더 큰 혼선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최근에 에너지 유가가 그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 같은 에너지 전략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적게 쓰겠지만 그래도 이젠 분위기를 바꿔놓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3개월 정도 지식경제부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지식경제부가 할 일과 주어진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단과 권한이 약하다는 고민이나 실제 그런 현실을 느낀 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나웅배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아주 언어러블 한 부처이고 그 당시에 상공부였던 재무부는 파워풀(Powerful)하고 컬러풀(Colorful)하다. 컬러풀하다는 건 주로 이벤트성 행사가 많고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통부와 과학기술부까지 합쳐서 외형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공부나 산업자원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많이 강화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수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수단이 부족하다면 지식경제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다른 부처와의 관계협력, 청와대를 통한 조정, 또는 이윤호 장관님 개인적인 역량 등 정책의 추진동력을 어떻게 얻으실 것인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평소에 고민하고 계시는 일곱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 일곱 가지 중 소위 올드 이슈와 뉴 이슈를 한번 외형상으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일자리, 신성장 동력,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경제 이것들을 제목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서 제시가 된 올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해외 개발, 국제수지 문제,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와 정비 문제는 비교적 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올드 이슈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셨는데, 특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서비스 산업을 어떤 방법으로 키워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지식경제부의 역할이 거기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그 수요 관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역

시 해외 개발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해외 개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최소한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사실은 거의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이 중요한 수요 관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출 증가율이 중국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은 아주 좋은 반면에 수출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설비 투자는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 하지 않고 계속 수출을 늘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될 요체는 중소기업분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문제는 우리 한국의 산업 정책 과제 중 가장 오래된 정책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정부에서는 중소기업문제를 과거의 정책과 어떤 차별화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하시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갑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부 웹사이트의 일대 혁신에 관한 것은 유념해서 지식경제부의 것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 위기에 속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철폐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업문제는 저희 입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하에 직영부 소관 공공기관이 69개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공기업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 민영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그것은 그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는 통폐합하겠다. 또 기타 기관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이 세 가지 갈래로 공공기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교수님께서 아마 궁금하신 것은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관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를 찾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다는 원칙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는 불행하게

도 규제 철폐에 대한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 것은 별로 없고 노동부나 국토 해양부 등 전부 다른 부서들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로 저희 부처 소관은 아니지만 기업과 관련된 밀접한 규제들, 즉 기업들이 원하는 것과 국제적 기준을 중점적으로 정책 입안시 참고 자료로 정리해서 해당 부처에 보내 준 것입니다. 저희 소관은 가스 석유와 같은 안전쪽 규제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국토 해양부와 전체적인 프레임과 방향성을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주도형 산업 강국을 위해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산업 차원에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부와 저희가 업무를 나누면서 기업과 가까운 R&D는 지식경제부 쪽으로 대신 인력 양성과 기초에 관련된 R&D쪽은 전부 과학 교육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스펙의 기준을 정확히 밝혀서 그쪽 분야가 좀 더 학계와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원 개발을 해야 된다고 크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원 개발 인력이 거의 양성이 안 됩니다. 유전 쪽은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학교에 자원개발 하는 광산과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르려고 하는 분야이지만 필요한 인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한 그런 분야입니다. 지역 개발의 효과면을 보면 기업·혁신도시에 관해서 지방 정부들이 상당한 공금증과 회의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내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큰 지역 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4월 24일에 세계 각 나라에서 하는 좋은 것들은 다 뽑아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이야기 했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제가 아주 혼이 난 것이 주택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을 넣었다가 언론한테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것은 주택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고 대신 공공 기관과 대형 매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

에서 물러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정책을 기안했을 때 의미는 저희들이 온도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에너지를 낭비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의도였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이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 조치도 구별의 모호성과 부처 간의 미합의로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비 1등급 차량의 수요증가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내로 에너지 효율화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캠페인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태 원장님께서 아주 어려운 논술형 질문을 많이 부탁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책임은 크고 정책 수단과 권한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부에 있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식경제부에 권한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면서 14조가 넘는 예산을 지역 발전, 산업발전, 그리고 R&D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에 쓰면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격발장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권한이 없다가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자원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목표를 위해서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따면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 산업정책이 다기화 되고, 관계가 많고, 중구난방식이 아닌 가해서 저는 이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선에서 정확하게 집행하느냐에 일단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일자리를 다니면서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대신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 자유 구역에 규제를 완화시키고 서비스 부분과 해외 마케팅 부분에 R&D 자금도 좀 더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풀어주고 이끌어 가는 정책으로 부분적 일자리 창출 숫자는 말하기 힘들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문제는 아마 수요 관리를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큰 대책 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고 며칠만 더 참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설



비 투자와 중소기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90여조 정도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많은 설비 투자를 늘렸던 대기업들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고무스러운 것은 1/4분기 통계를 보면 설비투자가 1.2%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수준은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불안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정세가 가라앉으면 좋은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중소기업 관련자들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시혜적인 정부지원은 없고 최소화할 것입니다. 대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R&D 분야일 수도 있고 해외 마케팅 분야일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코트라, 지사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있던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기지로써의 인큐베이터도 전부 코트라도 통합시켜서 코트라를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주는 일종의 종합상사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대상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자 인하대학교 교수)** 일곱 가지 중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는 기존의 정부가 주도하던 것이고 세 가지는 새로운 아이টে으로 보인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다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우리나라 경제학자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답을 정부가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집행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로써 구체적인 답이 없다면 국민한테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수위 때 받은 국민 제안이 유야무야 없어지고 흔적이 없다면 새로이 국민 제안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식경제부 온라인에서 지식경제부는 산업과 무역과 에너지를 하는 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무역은 결국은 아까 장관님이 이야기하신 규제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없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외국에서 97% 수입하는 것에만 너무 급급하고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130불까지 올라가면 서머타임 정도는 국가가 선도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빨리 당겨서 불을 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봄부터 가을까지 서양어디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면 에너지가 얼마나 세이브 될 것인가를 지난 정부 말기에 산자부가 만든 에너지 정책 연구원이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좋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사실 우리 삶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냉난방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단기적으로 따져서 아파트나 작은 집을 지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인 20센티미터가 아니라 독일의 40센티미터로 해서 냉난방을 자연스럽게 하는 인슐레이션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의 주력 부서라면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예가 제가 터널에 가보면 굉장히 긴 터널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지만 짧은 터널은 외국의 경우 사람들이 걸어 가거나 자전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터널도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국토 해양부가 아니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에서 제안을 해서 터널의 앞뒤가 보이는 곳은 앞으로 국가가 제도를 바꿔서 사람들이 걸어 가거나 자전거로 갈 수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터널에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된 정부의 비효율성이 참 많습니다. 제도는 지금 이 정부에서 바꾸겠다고 하니깐 제가 기대를 하지만 관행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알려진 관행도 있고 그렇지 못한 관행도 있습니다. 옛그제 교과부는 관행에 의한 정책의 결과로 굉장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도 나와 계시지만 공무원은 이 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각이 무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님같이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관행으로 해 오던 것을 보고 받았을 때 또는 부처를 움직이는 장관이 아니고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관행

이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를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신정부 초기에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데에 이러한 모습이 그야말로 기여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하나의 예로 정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가 국민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까지 경제 자유에 대한 몇 개의 규제가 있었으며 정부에서 초기에 몇 개를 풀었다는 평가지표를 분명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자아내는 길로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기 서울대학교 교수)**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가지 현안에 대한 걱정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인상을 받았습니다. 리스트가 너무 많고 모든 일에 다 대비해 있다고 안심을 시키려는 듯 한 인상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이 출발하면서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발표했던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해결 방법과 대책들이 국내의 이해관계에 대한 것과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제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외 통상 내지 대외 관계 쪽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경제 자유 구역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지식과 경제를 한 차원 높이며 고 부가가치를 강조하시려고 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라는 건 후진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과도 외국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가 작았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책 대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필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성장 산업을 주력화 한다. 그 다음에 R&D부분을 신성장 동력으로 산업화 한다. 공기업 조적을 효율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일곱 가지 중 제 귀에 잘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전에 국제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로 경제 대통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대통령, 세 번째는 의료 대통령 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401 국제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님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를 강조한 건 다들 아는 이야기이고 무엇으로 의료 대통령이라는 말을 강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식경제부 장관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성장 산업을 주력화해서 신 국부론을 창조한다고 하면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 것인지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의료 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중에는 단 한 말씀도 의료 산업에 대한 얘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신성장 산업을 주력화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R&D를 기업화와 산업화한다는 데에도 같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모 일간지에 보면 신 국부론까지 해서 의료를 산업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산업화 했을 때 가장 핵심 부분이 어디냐 했을 때 성형, 치과, 불임클리닉 이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도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치대 학장을 하는 입장에서 치과가 들어간 부분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계 최고의 손재주와 눈썰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 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우수한 0.5%의 인재들이 의대 치대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그 인재들을 실제로 산업화의 역군으로써 이용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20년 후에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냐 그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정도 성장을 이룬 것은 20년 전에 공대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잘 하시고 해서 이 정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공대라기보다는 의료계 쪽으로 입학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20년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산업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규제를 철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니다. 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어떤 친구가 텔런트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주걱턱 수술을 하려고 한다면 10가지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수술하는 의사가 그 친구를 보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중국으로 도망갈 가능성 때문에 함부로 보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규제 하나만 풀어줘도 몇 십만 명의 성형 수술 환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규제를 푸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것부터 풀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의 효율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업화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의 기업화도 한번쯤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10대 아웃소싱 병원의 대부분이 동남아에 있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삼쌍둥이 분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다 할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10대 아웃소싱 병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웃소싱 병원의 아이템 중에는 다행히도 성형과 치과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아웃소싱의 아이템을 한국으로 유치하고 그 분야를 의료 산업화하고 R&D를 하시는 것이 신성장 동력의 국부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주를 그런 도시 중에 하나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답도 알고 있다. 국민 제안을 귀담아 들어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선진국 만드는 답은 교보 서점에 가면 20권 이상 나와 있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안을 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까 라는 쪽에 훨씬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터널 통행 문제와 서머 타임 문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중 서머 타임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절감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 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자 교수님께 지난 4월에 만든 에너지 절감 대책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제도 관행을 고쳐야 된다. 제가 이번 교육과학부 사건을 보면 우리한테는 저런 게 없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교육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됐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 교육과학부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민상기 교수님께서서는 리스트가 너무 많고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어 있

지 않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일곱 가지 보시면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맞습니다. 지난 무역 투자 진흥회의 때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무역을 어떻게 더 촉진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민 교수님께 보내드릴 테니 코멘트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피드백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필운 교수님께 말씀하신 의료 문제입니다. 의료문제는 보건 복지 가족부 소관입니다. 이걸 제가 언급했다가는 부처 간에 야단이 납니다. 저희들이 늘 느끼는 건 의료 산업을 전통적인 인술로 볼 것이냐 산업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민의 정서로는 인술로 보고 산업 쪽으로 끌고 가려면 보통 야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 지향적이고 인술이라는 개념을 많이 받아들이는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잘 조화해서 산업적인 측면도 같이 잘 살려 나가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틀림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현 부즈알렌&해밀턴코리아 대표)** 말씀하신 일곱 가지 과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제가 과연 과거 정부와 과제 선정에 있어서 다른 것이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제는 좋은데 과거 정부와 수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다를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정부가 추진하는 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로 하겠다는 것이 큰 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서 실행하려고 하는 아이টে를 보면 정부 주도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는 정부가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막고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다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례를 들면 구체적으로 R&D 지원과 디자인 센터와 같은 해외 수출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직접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민간 섹터, 즉 시장에서 유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정거래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것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출 이전에 국내 시장에서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거래 관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파트너십 개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질문인데 지식경제부 내에 공기업이 69개가 있고 이걸 민영화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민영화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최 교수님께서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보면 개방 경제 시대의 정책 수립을 너무 과거의 베이스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고무풍선을 불 때 풍선에 구멍이 나서 아무리 불어봤자 바람이 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국내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수립해도 개방경제에서는 제한된 게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입안의 효율성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인 투자를 얘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을 볼 줄 알고 왜 한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외국의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한 5년 전부터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차별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보시지 않으면 FTA도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정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 또한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가볍게 말

씀을 드리면 언론을 통해서 보이는 정부의 모습이 기업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장 친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명박 정권의 색깔과 상당히 비슷할 텐데, 기업 친화적이라고 하니 근로자도 제외된 것 같고 시장에서 소비자도 제외된 것 같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산자부가 지식경제부로 바뀌었는데 지식혁신 주도의 산업 강국이 비전으로써 일곱 가지 정도의 과제들이 하나의 고을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현안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많아서 과연 미래 지향적이고 선진화를 위한 작업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을지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미래 세계는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진화를 위한 창의성이나 자율성 같은 것들이 현안 과제들 속에 녹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에너지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고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 혼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 NGO들과 소비자 단체들 그리고 언론의 도우미와 다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과 같은 정책과 정부의 이미지로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인사 문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국민에게 비추어 지는 모습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저도 한전 사회 이사 사장 추천 위원회와 한전 사회 이사도 해 봐서 내부에 들어가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밖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성공이 있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점점 어려운 질문으로 저를 끌고 가셔서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경제 문제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방법론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주도로 간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기업문제를 포함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맡기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 독점이 생기면 일단 경쟁 체제로 해결하려 합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면서 늘 강



조하는 것이 민간 부분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거처럼 위세를 부리거나 권한을 가지고 사기업의 영역에 개입하거나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가능한 한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문제는 시장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가격결정시스템까지 정부가 개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정 거래 문제는 저희들이 공정거래 위원과 잘 협의해서 시장 기본 원리를 해치지 않고 불공평 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 전에 경제 자유 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제가 좀 움츠러듭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획기적으로 바꾸기에는 아직 힘이 들고 1단계를 해 보고 2단계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 내에 다시 한 번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문 교수님께서 시장 친화적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친화적과 기업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그동안 같이 썼는데 언론계에서는 기업 친화적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안이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제 효율화, 창업절차 간소화, 경제 제도 선진화 방안, 산업 R&D 전략, 무역 투자 진흥회의, 경제 자유 구역 활성화 과제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현실화하여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기 국회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들이 법령으로 재정 되고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 실천에 옮겨 집니다. 법률 제정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달 동안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파이프라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이제부터 할 것만 해도 이노베이트 코리아 전략, 국가 에너지 위원회, 장기 에너지 대책, 공기업 출연년, R&D 관련 기관 개편 방안, 신성장 동력 중장기 비전,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 이 정도로 아직도 파이프라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안 문제가 아니고 5년 10년 앞을 둔 그러한 개혁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이 과거와는 훨씬 다르게 시

장 친화적으로, 민간 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소비자의 자율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는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문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는 잘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허노중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는 이경태 원장님이 하셨는데 해답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식경제부에 찾아갈 때는 대부분 큰 형님 집에 찾아가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도 기업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갑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동감도 하고 업체의 사정을 인정은 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법률을 다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처 관련 사항인데 공문 하나 보내놓고 우리는 할 일 했다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뛰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업계의 부탁이나 들어주고 다닌다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업계의 입장을 반영시켜주는 것이 지식경제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는 지식경제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마음 편하게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에 수단이 없다고 하면 찾으려면 됩니다. 정책 부서에 있더라도 각 부서에서 법률 고칠 때 그리고 의견 조화를 한때 강력하게 나가서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입장에서 위치를 바꿔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과 동시에 현실을 전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우선 처음에 일곱 가지 아젠다를 말씀해 주시면서 일종의 장관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 시험을 보실 때 일곱 가지 내 놓는 건 아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곱 가지를 내시면서 우선순위를 말씀 안 하시고 열거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일곱 가지에 관해 별땀 같은 비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관념에 의하면 일곱 가지 이슈가 틀림없이 맞는데 이제는 접근 방법과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기존의 개념과 새로운 개념의 균형 잡힌 절충점에서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입

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치 지식경제부의 자문위원회 같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곱 가지 과제를 보니까 내용 중에서 소위 상관성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 먹거리 걱정, 중소기업 걱정, 그리고 지방경제 걱정 이 네 가지의 걱정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네 가지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자원 걱정은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제수지와 지방경제는 여기에서 다루어야 되지만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조직변화 결국은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걱정, 먹거리 걱정, 중소기업걱정, 그리고 지방행정 걱정은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이진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거나 결과입니다. 원인을 다루지 않고 결과만 다루면 안 되고 시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은 정곡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민영화는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경제부에만 공기업이 69개의 부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까지 하면 몇 백 개 될 것이고 민영화만이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민영화가 정답일 수 있는 건 4분의 1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4분의 3은 사실 민영화가 정답이 아니고 컨설팅과 평가를 통한 내부의 효율성을 향상입니다. 대부분은 CEO가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가기만 현재 공기업 체제에서도 문제없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의 정치적 코드 때문에 난맥이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민영화로 해결해 보자는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과정에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식경제부의 해당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이 혼자서 결정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일곱 가지 이슈는 결국 시장 문제와 절약 문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민 교수님이 한 두 개 정도로 이슈를 압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지식경제부의 시장에서 역할인 지원과 규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규제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하나의 지원에 규제가 세 개가 붙습니다. 결국은 규제를 줄이려면 지원을 줄여야 합니다. 교과서에 보면 금융지원, 재정지원, 행정지원, 정보지원, 그리고 보험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 지

원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나쁜 지원이 돈을 풀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금융 지원입니다. 보험 지원은 굉장히 양질의 지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권력이 금융이나 재정 쪽으로 갈 때 시혜적인 지원이 됩니다. 행정, 정보, 보험지원은 서비스 차원에서의 지원이니까 관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색이 나지 않으니까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금융이나 재정 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규제가 몇 배로 붙고 결국은 눈덩이처럼 규제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금융지원을 줄여야 하는데 저는 지식경제부에서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14조를 올 연말에 7조밖에 안 쓰고 7조를 국고에 반납하면 전 국민들에게 최고의 부서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14조를 쓰는 과정에서 42조에 해당하는 규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부 관리가 되시면 아시지만 정부에서 이런 돈을 쓸 때 진짜 그 돈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써졌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에 그 해당 부서에 관해 몇 번 기사가 났느냐는 극단적인 평가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 하에서는 돈을 아무리 써 봤자 결국 다 국민에 대한 부담으로 가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금융 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원을 하더라도 공급자한테 들어가지 않고 필요하면 시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산업발전 심의위원회가 어느 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로비로 인해 자금이 공급자나 생산자한테 들어갑니다. 특히 공급자로 들어가면 결국 대기업으로 들어가거나 시장 중에서 정부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왜곡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기업 출신인 이윤호 사장님이 장관이 되셨다는 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나 하면 민간 기업이 제일 강한 게 평가입니다. 내부 직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관리들이 신문에 발표 나는 것에 의해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평가해서 올려준다면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간 부분에서 가지고 계신 직원들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게 장관으로써 제일 크게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시장과 절약 두 가지가 있는데 절약은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는 시장이 더 중요한데 지금은 절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자원과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절약에 지식경제부의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서 그것 하나만 해결하시면 지식경제부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제가 모범답안지 속에 써 놓은 기본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업과 국민을 섬기는 지식경제부가 되자는 것이 큰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지금 기업 도우미 센터라는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쪽에 가상적으로 아니면 진짜 필요한 사람으로 신청해 보십시오. 한번 활용해 보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동성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잘 새겨서 정책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에너지 절약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안 되는데 사실 재래시장과 업체로 주말마다 현장 방문을 다닙니다. 현장에 가면 그쪽 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저도 가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많은 경영 자원이 나 하나 현장에 간다고 해서 낭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은 아주 살아있습니다. 이것의 에너지를 잘 모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꼭 자문위원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100일 됐는데 꼭 100년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빠르고 큰 기대감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국회가 한번 열리고 입법 과정이 한 번 있어야 구체적인 정책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움직임과 그 성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시장 친화적인 정책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HRI**

---

정리 및 교열

이성룡 연구위원([leesy@hri.co.kr](mailto:leesy@hri.co.kr)) ☎ 02-3669-4134

---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                                 |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        |        |         |         |
|---------------------------------|----------------|-----------------|--------|--------|--------|--------|---------|---------|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P) | 2008(E) |
| 국<br>민<br>계<br>정                | 경제성장률 (%)      | 7.0             | 3.1    | 4.7    | 4.2    | 5.1    | 5.0     | 4.9     |
|                                 | 최종소비지출 (%)     | 7.6             | -0.3   | 0.4    | 3.9    | 4.8    | 4.7     | 3.5     |
|                                 | 민간소비 (%)       | 7.9             | -1.2   | -0.3   | 3.6    | 4.5    | 4.5     | 3.4     |
|                                 | 총고정자본형성 (%)    | 6.6             | 4.0    | 2.1    | 2.4    | 3.6    | 4.0     | 4.3     |
|                                 | 건설투자 (%)       | 5.3             | 7.9    | 1.1    | -0.2   | -0.1   | 1.2     | 2.8     |
|                                 | 설비투자 (%)       | 7.5             | -1.2   | 3.8    | 5.7    | 7.8    | 7.6     | 6.5     |
| 대<br>외<br>통<br>관<br>래<br>기<br>준 | 경상수지 (억 \$)    | 54              | 119    | 282    | 166    | 54     | 60      | -10     |
|                                 | 무역수지 (억 \$)    | 103             | 150    | 294    | 232    | 161    | 146     | 60      |
|                                 | 수출 (억 \$)      | 1,625           | 1,938  | 2,538  | 2,844  | 3,255  | 3,715   | 4,330   |
|                                 | 증가율 (%)        | (8.0)           | (19.3) | (31.0) | (12.0) | (14.4) | (14.1)  | (16.6)  |
|                                 | 수입 (억 \$)      | 1,521           | 1,788  | 2,245  | 2,612  | 3,094  | 3,568   | 4,270   |
|                                 | 증가율 (%)        | (7.8)           | (17.6) | (25.5) | (16.4) | (18.4) | (15.3)  | (19.7)  |
| 기<br>타                          | 소비자물가 (평균 %)   | 2.7             | 3.6    | 3.6    | 2.8    | 2.2    | 2.5     | 3.8     |
|                                 | 실업률 (%)        | 3.1             | 3.4    | 3.7    | 3.7    | 3.5    | 3.2     | 3.3     |
| 금<br>융                          | 원/\$ 환율 (평균 원) | 1,253           | 1,192  | 1,145  | 1,024  | 955    | 929     | 995     |
|                                 | 국고채금리 (평균 %)   | 5.8             | 4.6    | 4.1    | 4.3    | 4.8    | 5.2     | 5.0     |